

“장애인 지원사업 관리감독 미흡”

신유정 전주시의원, 시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서
장병익 시의원 “현금성 복지 사업 대비책 필요”
최주만 시의원 “성인지사업, 예산편성 목적 부합해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4일째 진행되고 있다.



신유정 의원



장병익 의원



최주만 의원

먼저, 신유정 의원은 21일 복지환경국 장애인 복지과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2년부터 총 6,731건 약 3억6,000여만원이 부정수급 적발됐다고 했다. 이 외에도 진술 반복 및 신빙성 결여 문제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금액도 약 10억원 가량이 있다고 하며 이를 전주시가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물었다. 이어서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에 대하여 공익제보 이후 7월 17일 단 한번의 ‘이용자 자택 불시 방문 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적발한것에 불과하다.”며 “전주시에서 활동지원 기관 중 지급 3개 기관에서만 약 14억 가량이 적발되었다. 나머지 10개의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했다. 문제는 현재도 부정수급이 적발된 활동지원기관과 이용자 등이 여전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행정에서 제한 등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부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본예산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비를 조속하게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장병익 의원은 같은 날 복지환경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안부에서 개정된 지방교부세 페널티 기준과 관련하여 전주시의 현금성 복지 사업에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은 1.0% 증가했다. 그러나 환경예산 삭감을 높여, 기후위기 대응에 힘써야 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상황 우려된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22년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된 사항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에서 페널티를 주고있다. 2023년 전주시의 현금성 복지규모는 29.5%로 이는 지방 동종단체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현금성 복지비란 예산안에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등 통계목으로 편성된 예산 총액을 말하는 것으로, 전주시 복지에 산의 상세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성 제기된다. 이런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시민들입에도 정작 이 사항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신속하게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대응을 요구하였다. 최주만 의원은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를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은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편성해야 하는데, 여성 가족과에서 추진하는 성인지예산 사업은 다른 화청소년의 진로 지원으로 예산편성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복지환경국 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아동, 장애인 및 노인복지사업 등이 다수 존재하는데도, 아동, 장애인, 노인 복지 사업이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여성가족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 성평등, 성격차 해소는 노력해야 하는 부서이므로 성인지예산 사업을 추진에 있어, 예산편성 목적에 더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한옥마을 가로수 곳곳에 설치된 트리허그. 원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21일 전주한옥마을 가로수에 트리허그(잡목소)가 설치돼 있다. /뉴스

전주시설공단, 선제적 반대 방제 나서

내달 8일까지 4주간 '반대 집중점검·방제' 진행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반대가 출몰하면서 때이던 반대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선제적인 반대 방제에 나섰다. 공단은 다음 달 8일까지 4주간을 반대 집중점검 및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현재까지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서 반대가 목격된 적은 없다. 공단은 현재 체육시설과 공영시설, 장사시설, 주차시설, 운송시설 등 7개 분야의 3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 가운데 반대 취약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없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 인천, 충남, 대구 등지에서 반대가 잇따라 출몰하면서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어 선제적으

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공단은 각 특성에 따라 시설별로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매일 1회 반대 출몰 및 서식 여부를 확인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반대 확산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와 반대 발생 시 대처 매뉴얼 등을 각 부서에 전달했다. 또 각 시설에 반대 관련 자료와 홍보물을 비치해 시민들이 반대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구대식 이사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판로 개척 '집중'

1억 원 매출 달성 SK스토아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 추진... 두 번째 상품 '천연 육수팩' 방송

전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주력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매출 증대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신규 정책으로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과 구동경제 서비스 운영 등을 적극 운영하는 등 소상공인 판로 개척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이달 중 데이터 홈쇼핑채널인 SK스토아와 협업해 추진하는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의 두 번째 지원

상품 판매 방송을 진행한다. SK스토아의 최종 컨설팅을 거쳐 편성된 두 번째 지원 상품은 '찌얌에프엔비'의 천연 육수팩이 합리적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전주구독'은 비용효율적인 구독경제로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중소기업벤처부의 소상공인 구독 경제화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해 추진하는 사

업으로, 시는 그간 운영해온 공공배달 앱 '전주맛배달' 앱 내 정기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독 가능 상품을 지난 8월부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규문 경제산업국장은 “다가오는 2024년에도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판로지원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우리 지역의 디지털 경제체계를 강화하고 선도적으로 견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내년 장애인 일자리 '확대'

일반형 일자리 118명·복지 일자리 225명·특화형 일자리 43명

전주시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시는 2024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으

로 올해 353명보다 33명 늘어난 386명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분야별 일자리 규모는 △일반형 일자리(118명) △복지 일자리(225명)

△특화형 일자리(43명) 등이다. 이와 관련 시는 다음 달 1일까지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를 35개 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복지 일자리와 특화형 일자리 참여자의 경우 전북장애인복지관과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평화사회복지관, 사회적협동조합 느루결음 등 위탁수행기관에서 별도로 모집할 예정이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내년 480명 대상 공공근로사업 추진

올해 시비 총 23억6700만원 투입·소득층 생활 안정 도모 등... 내달 5일까지 신청자 모집

전주시가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청·장년층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 총 480명에게 희망의 일자리를 제공기로 했다. 시는 시비 23억6,700만원을 투입해 '2024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청년 180명과 65세 미만 300명 등 총 480명으로, 시는 분기별로 약 120명씩 모집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에 추진될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124명으로, 시는 오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참여 자격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근로 능력이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면서 가구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전주시민이다. 단, △직전 연속해 3단계 참여한 자 △실업급여 수급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등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조건은 청년일자리사업(18~39세)의 경우 하루 7시간씩 주 35시간, 65세 미만 일자리사업은 하루 5시간씩 주 25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시급 9,860원과 부대경비 5,000원에 주·월차, 공휴일 유급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선발된 시민은 내년 1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물물등록 DB구축사업을 비롯한 DB 구축사업 △도서관 자료실 활성화 사업 등 △전주한옥마을을 가꾸기 사업 등 총 69개 사업에 배치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2396)로 문의하면 된다. 김규문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공공근로사업을 지역 현안 사업과 연계하고 지역 주민의 호응이 많은 사업 중심으로 추진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